

December, 2025 **개정판**

대한민국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2023~2027)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 부패 방지, 포용적 디지털 전환 등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참여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열린정부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한민국 정부의 열정과 실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OGP 초대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제11대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서밋(OPG Global Summit)을 주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1년간 다섯 차례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총 53개 과제를 이행했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실행계획은 정부가 앞장서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제4차 실행계획(2018~2020)부터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수립과정을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은 OGP가 제4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의 영향력(Level of public influence)을 ‘참여’ 단계에서 ‘협력’ 단계로 상향 평가한 결과로도 나타났다. 이후 제5차 실행계획(2021~2023)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 등 주요 과제를 발굴하였고, OGP는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활동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이를 OGP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에 공유하기도 하였다.

2023~2027년을 이행 기간으로 하는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은 그간 변화된 국제적인 환경 요인들을 고려하고, 다섯 차례의 열린정부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과 평가를 토대로 수립하였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OGP 운영 규정에 따라 2개년이 아닌 4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일반 국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정부기관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7개 중앙정부와 22개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로서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발전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정부	행정안전부(위원장, 간사),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민간	한국투명성기구(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간사), 정의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단국대학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로앤컴퍼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레티스랩, 가천대학교, 코드포코리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청주YWCA,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에코맘코리아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을 상대로 열린정부 과제를 공모한 결과 투명성, 반부패, 참여 분야에서 51건의 국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정과제 등에서 열린정부 가치와 관련성이 높은 22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후 열린정부위원회 주관으로 OGP 가치와의 정합성, 제안의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77개의 과제 중 22개의 과제가 1차로 선정되었고, 이후 정부 기관들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10개의 과제가 2차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논의된 실행계획 과제들을 숙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정부위원회와 함께 OGP가 주관하는 세계열린정부주간(2023.5.8.~5.12.)을 계기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사회, 국제협의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고, 제6차 실행계획으로 논의된 과제의 국민 제안자와 정부 기관들이 함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와 민관합동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열린정부 실행계획 초안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2주간(2023.6.26.~7.9.) 대국민 의견조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등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마련부터 시민사회와 관계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총 10개의 과제가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최종과제로 선정되었다.

반부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디지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시민참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다만, 숙의과정에서 과제화되지 못한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민간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서는 다음 실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열린정부 실행계획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제언을 숙의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민관협력 거버넌스 증진을 통한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열린정부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p>반부패 분과</p>	<p>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반부패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쳤으나, ‘법률용어 개선’과 ‘명예훼손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비범죄화’ 등의 제언은 최종적으로 실행계획 과제로 선정되지 않았다.</p> <p>‘법률용어 개선’은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사용된 법률을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하여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판단된다.</p> <p>또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명예훼손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필요하다. 이상 2개 제언에 대해서는 반부패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회나 세미나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국가 투명성 확보 및 한국의 부패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p>
<p>디지털 분과</p>	<p>디지털분과위원회에서는 열린정부 실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등 디지털정부와 관련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개선점이나 정책 대안 등을 논의하였다.</p> <p>앞으로 디지털분과 내에 워킹그룹 또는 TF 형태로 가칭 디지털정부 이용자포럼을 설치하여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이용자를 초청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구체적인 개선점이나 정책 대안 등을 모색하는 열린 공론장 형태로 운영하고, 포럼 논의 결과를 디지털정부 관련 국민의견 수렴 창구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p>
<p>국민참여 분과</p>	<p>열린정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렴된 국민제안에 대해서 국민참여분과위원회에서 숙성회의 등을 진행하였으나, ‘에너지 데이터의 공공성 제고’ 등의 제언은 최종과제로 선정되지 않았다. ‘에너지데이터의 공공성 제고’는 국내 정부의 통합적인 정보축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전 정부적 과제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환경데이터, 정보의 시민접근성 제고와 정보공유를 위한 정부의 실천을 촉구하는 연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p> <p>세계자원연구소(WRI)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오픈데이터 전략’ 조사보고서(2021년)를 발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실천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에너지데이터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부문별, 공정별로 세분화된 에너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정보제공 플랫폼의 실질적 정보제공과 공유,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p>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목록

분야	연번	과제명	협업 기관
반부패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통합추진단)
디지털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확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국민참여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총괄과)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 협업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시민영역 보호 및 확대로 '시민참여 활성화' 및 '반부패'에 기여

📅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반부패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반부패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1.)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반부패분과 토론회 (2023.5.10.)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 추진 배경

공익신고제도는 행정 권력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쉽지 않은 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등 사회 전반의 부패 통제를 위한 효율적 제도이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도 공익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공익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익 관련성이 높음에도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구, 부정청탁, 이해충돌행위' 등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별로 보호 및 지원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과제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정비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구, 부정청탁, 이해충돌행위* 등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개선하여 어떠한 부패 관련 및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동일한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지원 수준 범위의 확대

- 공익침해 행위의 포괄적 규정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상 법률을 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 의미를 확장한다.
- 공익 관련성이 높음에도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들을 검토하고 공익 관련성이 높은 법률의 경우 공익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 법률을 추가
-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으로 확대하고 이를 홍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다.

기대 효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정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수준 범위를 확대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시민들의 반부패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법령 마련 및 시행	2023.6.22.	2023.9.22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의 정비를 위한 입법 추진	2023.8.1.	계속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 관련 입법 추진	2023.9.1.	계속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 협업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통합추진단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행정심판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부패 방지

📅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반부패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반부패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1.)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반부패분과 토론회 (2023.5.10.)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회시판) (2023.6.26.~7.9.)

🔍 추진 배경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일반인이 청구서를 작성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과제 내용

행정심판 참여 확대를 위한 청구서·신청서 자동완성 서비스 및 맞춤형 사례제공 등 리걸테크(LegalTech)* 원스톱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한다.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온라인 서비스

① 데이터 개방·확대

행정심판 데이터를 기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변환하고 공개 건수를 확대하여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는 열린정부 구현'에 기여한다.

② 맞춤형 사례제공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내용과 과거 완료된 사건의 연관 분석을 통해 청구인 상황과 유사한 맞춤형 사례를 제공한다.

③ 청구서 자동완성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 표준 서식에 맞게 자동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모범사례를 통한 청구서 자동완성서비스 적용기관 확대를 위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한다.

- 일반·특별 행정심판 등 90개 행정심판 기관의 행정심판 온라인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결례 공개 확대 및 청구서·신청서 작성 편의를 제공한다.

💡 기대 효과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무엇인지, 청구서 작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며 청구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한다.

🕒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이지행정심판 구축 및 서비스 개시(1차 오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51개	2022.7.1.	2023.6.30.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BPR·ISP·ISMP ※ 흩어져 있는 온라인행정심판 창구를 통합 및 행정심판 재결례 빅데이터 개방·확대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및 이행로드맵 마련	2023.2.23.	2023.8.21.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 90개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통합과 빅데이터 재결 DB구축 및 위법·부당 유형별 재결례 공개 기반 마련	2024.1.1.	2025.6.2.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운영	2025.6.2.	계속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 협업 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책의 포용가치 증진

📅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디지털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디지털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19.)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디지털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회시판) (2023.6.26.~7.9.)

🔍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편 결과 10만 3천 건 이상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25.6월 기준)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4회 연속 세계 1위(OECD, '15년, '17년, '19년, '23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의 다운로드 건수는 8,300만 건 이상, 오픈 API 신청은 627만 건 이상('25.6월 기준) 돌파했다.

* 예) 2024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217개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3,200개 이상에 달하는 등 부가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요소수 판매정보 및 코로나-19 마스크 재고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공급자인 행정·공공기관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며, 수요자인 국민·기업 관점에서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여지가 있다. 이는 수요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미공개 데이터를 포함한 보유 데이터 전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미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보도 공개하여 국민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과제 내용

미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공공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는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공개 사유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필요시 법제도 개선).

① 공공

-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한다.
- 미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명, 생성기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② 민간

- 미공개 공공데이터 중 필요한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
-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정책*을 통해 홍보한다.
- * 빠띠 시민공익데이터 실험실,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 등

③ 공공-민간 협력

- 공공데이터 기본(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재검토하여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 오픈데이터포럼 등 민·관이 함께 하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하여 미공개 데이터 사유화를 논의한다.

기대 효과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데이터 제공 확대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국민이 직접 공공데이터의 개방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공공데이터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힘 돋우기 (empowerment)의 경험을 제공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범정부 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2023.6.	매년 계속
미공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전문 연구반 운영	2023.6.	매년 계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추진	2023.6.	매년 계속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이행	2023.6.	2025.12.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이행	2026.1.	2027.5.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 협업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한 공적 책임성 제고

과제 발굴 과정

- 정부과제 발굴 (2023. 2.)
- 디지털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디지털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19.)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디지털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최근 들어 빅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에 따라 상황인식, 의사결정, 그리고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또한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이슈를 포착하여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알려주거나, 신종·급증 민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계기관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제 내용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개별창구 등을 통해 연간 1,400만 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불편 및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예보를 발령하여 관계기관이 적시에 조치하도록 유도한다.

■ 민원 예보 프로세스

발령기준

- 기본적으로 민원 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하되, 민원 발생 주기, 발령 시점 등에 따라 정기·수시 민원예보로 유형을 구분한다.

발령방법

- ‘국민의 소리 주·월간 동향’ 수록 및 민원분석 시스템에 등재한다.
- 관계기관에 예보발령 공문을 발송한다.

사후관리

- 예보발령 후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 민원 발생 추이에 따라 예보 단계를 상향 또는 해제한다.

💡 기대 효과

민원 빅데이터에 수집된 사회 현안 및 국민 안전·불편 사항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기에 포착, 민원예보를 발령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 예방에 기여한다.

🕒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월간 예보·수시예보 발령	2023.6.	매월 계속

5.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구현

- 협업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통한 포용가치 향상 및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과제 발굴 과정

- 정부과제 발굴 (2022.10.11.~11.14.)
- 디지털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디지털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19.)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디지털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회시판) (2023.6.26.~7.9.)

🔍 추진 배경

생성형 AI의 개발 등을 계기로 디지털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물론 새로운 차별과 소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편리하게 디지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체적 이유로 ‘디지털배움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디지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 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에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총 341만 명에게 디지털 기초·소양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누구든 언제나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36개소)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은 2019년 69.9%에서 2024년 77.5% 수준까지 상승했다.

한편, 장애인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운영하여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3,000대 이상, 120종 내외의 다양한 ICT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웹접근성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성과를 환류하고 있다.

📖 과제 내용

디지털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서비스를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① 디지털 교육 확대

-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운영에 더해 경로당·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AI의 활용 방법까지 실생활 위주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 상시 자발적·반복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키오스크·앱 등을 대상으로 에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 ChatGPT, 금융, 전자상거래 등 일상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모방한 실습용 프로그램

② ICT 보조기기 보급 및 디지털기기 접근성 향상

- 장애인 대상 ICT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Leaving no one behind),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운영하여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리소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 개선 솔루션을 보급한다.

③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웹접근성 실태조사

-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일반국민·취약계층(고령층·장애인 등)의 정보화 수준(접근·역량·활용)을 조사하여 국내 디지털 격차를 진단한다.

-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보장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대 효과

디지털 교육 및 ICT 보조기기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Leaving no one behind)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디지털배움터 운영	2023.4.	계속
장애인 대상 ICT 보조기기 보급	2023.9.	계속
디지털 접근성 실태조사, 웹 접근성 실태조사	2023.9.	계속

추가정보

대한민국 국정과제 21-2와 연관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 협업 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영역 보호

📅 과제 발굴 과정

- 정부과제 발굴 (2022.10.11.~11.14.)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국민참여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0.)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국민참여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 추진 배경

사회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주도의 자율적·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시빅테크란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현안과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민참여 운동이며, 시빅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상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과제 내용

정부 정책 실행 과정에 데이터 제공,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예: (정부) 장애인 시설정보 제공 + (시민) 데이터 활용 → 장애인 이동경로 제공 앱 개발

💡 기대 효과

오픈데이터포럼을 통한 시민주도형 세미나 및 성과공유회 개최

① 세미나

포럼 구성원과 일반 시민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관련 분야 별 주요 이슈 및 주제 선정, 세미나·강연 등을 기획·개최한다.

② 성과공유회

오픈데이터포럼의 연간 활동 성과(리빙랩 우수사례 등)를 발표한다.

리빙랩 운영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인 리빙랩을 운영한다.
-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공공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 리빙랩 공모전 진행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한다.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사회적 현안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④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23년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빅테크 운영	2023.6.1.	2023.12.31.
'24년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빅테크 운영	2024.6.1.	2024.12.31.
'25년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빅테크 운영	2025.6.1.	2025.12.31.
'26년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빅테크 운영	2026.6.1.	2026.12.31.
'27년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빅테크 운영	2027.6.1.	2027.12.31.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협업 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영역 보호

📅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국민참여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0.)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국민참여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 추진 배경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낙인을 찍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폭력을 조장하여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임. 또한 상당수의 국민은 혐오표현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에서 ‘정부 차원 종합적 혐오차별 대책 수립 필요하다’는 응답이 80.9%

사회적 해악이 극명한 혐오 표현에 대한 행위규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 반차별 정책을 비롯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마련,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혐오표현 대응계획 등을 확인·공유하고, 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 각 영역에서 혐오표현 대응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과제 내용

대한민국 정부의 혐오표현 대응 계획 공유, 공공 부문, 기업, 언론(미디어), 연구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차별 및 혐오표현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OGP 세계열린정부주간을 계기로 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 기대 효과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혐오표현 대응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

📅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정부(지방정부 포함) 혐오표현 대응 정책 현황 조사	2023.8.	2024.5.
‘혐오표현 대응회의’(가칭) 개최 ※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참여	2023.8.	계속
’24년 세계열린정부주간 토론회 개최	2024.5.	2024.5.
혐오표현 대응 정책 토론회 개최 ※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2024.6.18.)	2024.6.	
정부의 혐오표현 대응 관련 해외사례 및 국내 과제 연구	2025.1.	2025.12.
지방정부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개발 및 보급	2025.3.	2027.8.
’26년 세계열린정부주간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혐오표현 대응 방안 모색)	2026.5.	2026.5.
’27년 세계열린정부주간 토론회 개최 (지방정부 혐오표현 대응 현황과 과제)	2027.5.	2027.5.

8.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

- 협업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소외계층 포용, 민간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

📅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국민참여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0.)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회시판) (2023.6.26.~7.9.)

🔍 추진 배경

장애자, 고령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군과 구 단위에서는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또한, 안전/안심 사업은 장소 기반 사업으로 시군구 지자체 91%의 높은 비중이나 모든 이(범용)를 위한 디자인은 시 35.3%, 군 17.8%, 구 13.5%로 상대적 부족한 실정이다.

초고령 사회, 1인 가구 폭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을 비롯한 모두가 장애, 언어, 행위에 제약 없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 체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및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 과제 내용

색약자, 노약자, 미취학아동,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 외국관광객 등을 고려한 실물 또는 디지털 사인물 및 색채 개선을 통해 한국형 유니버설 디자인 고도화 및 의식을 제고한다.

① 공공디자인 혁신적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한다.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등) 기술변화(인공지능, AI 등), 환경변화(기후변화 등)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선도모델을 적용 및 확산
- (2024) 공공디자인 혁신 대상지 시범 적용 및 혁신모델 개발·확산

② 범부처 협력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2022) 해양안전·안내체계 가이드라인(해양경찰청), 한국형 과학관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국립중앙과학관)
- (2023) 교통·보행안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행안부), 소년 보호시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법무부)
- (2024)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행안부),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가이드라인 개발(문체부)

③ 국민 참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개선 및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대국민 투표 선정과정 적용),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우수 아이디어 발굴·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추진)

④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외국인 및 고령자 등 소외 약자들의 정보 인지를 고려한 시각정보 및 색채를 개선하고, 각 시·도·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국가 표준 체계를 정립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⑤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제고 위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공감, 공공디자인 토론회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기대 효과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소외계층 포용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대상지 유형별 통합 공공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개선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2023.5.	2023.12. (연 신규4개소)
범부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2023.6.	2023.12. (연 신규 2개처)
국민참여공공디자인아이디어개선워크숍추진(공공디자인국민아이디어공모전)	2023.7.	2023.10. (시상, 연 1회)
국민 참여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선정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2023.5.	2023.10. (시상, 연 1회)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및 토론회 개최	2023.10.	계속 (연 1회)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024.3.	2024.1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모델 시범적용 및 개발·확산 (공공디자인 혁신 지원)	2025.1.	2025.12. (연 4개소)
범부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2025.1.	2025.12. (연 2개)
국민 참여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선정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2025.5.	2025.10. (시상, 연 1회)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및 토론회 개최	2025.10.	2025.10. (연 1회)

9. 열린관광 환경조성

- 협업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소외계층 포용, 민간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

📅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 추진 배경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등을 포괄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 과제 내용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여행활동을 돕는 투어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① 환경적 측면

- 관광지 내 물리적 환경(주차장, 화장실, 경사로, 보행로, 단차 등 이용·편의시설 개·보수)을 개선한다.
- ※ 열린관광지 '24년 신규 30개소 조성, 누적 162개소

② 정보적 측면

- 무장애 여행코스를 발굴하고, 무장애 여행정보 DB의 개선·신규 확보(연 1,000개 목표), 그리고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을 고도화(관리운영) 한다.

③ 서비스 측면

- 투어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무장애 전문여행사의 육성과 지원, 관광취약계층에 여행 기회를 제공(나눔 여행)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그리고 콘텐츠 개발 등을 실시한다.

💡 기대 효과

열린관광지 조성을 통해 관광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23년) 열린관광지 신규 20개소 선정 및 조성	2023.1.	2023.12.
('24년) 열린관광지 신규 30개소 선정 및 조성	2024.1.	2024.12.
('25년) 열린관광지 신규 20개소 선정 및 조성	2025.1.	2025.12.
('26년) 열린관광지 신규 30개소 선정 및 조성	2026.1.	2026.12.
('27년) 열린관광지 신규 30개소 선정 및 조성 ※ '27년 누적 252개소	2027.1.	2027.12.

📌 추가 정보

국정과제 '61-2.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과 연관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 협업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소외계층 포용, 민간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

📅 과제 발굴 과정

- 정부과제 발굴 (2023.2.)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 추진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미디어 접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문화·여가 생활 대부분을 방송과 미디어에 의존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이용과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정책이다.

📄 과제 내용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접근권을 강화한다.

①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 (현황)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방송물에 대한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 (계획) 장애인방송에 대한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방송 콘텐츠의 수요자인 시각·청각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장애인 방송제작지원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② 시각청각장애인의 기기접근성 강화

- (현황)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맞춤형 기능이 탑재된 방송수신기(TV)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계획) 시각·청각장애인을 방송수신기(TV) 수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시각·청각장애인을 TV 보급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기기접근성 제고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계속	계속
장애인방송 만족도 및 이용실태 조사	계속	계속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계속	계속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만족도 및 이용실태 조사	계속	계속

❓ 추가 정보

국정과제 '59.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과 연관



December 2025 **Revised Edition**

The 6th National Action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2023~2027)





Overview of the 6th National Action Pl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honor and implement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open government, including enhancing policy transparency,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combating corruption, and ensuring an inclusive digital transformation. The National Action Plan, which has undergone five rounds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since Korea joined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demonstrates the Korean government's passion and commitment to open government and democrac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member of the OGP since its inception in 2011 and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spreading open government values by serving as a government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since 2017 and hosting the Global Summit as the 11th Chair in 2021.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five National Action Plans over the past eleven years, from 2012 to June 2023, implementing a total of 53 projects. The three initial action plans were led by the government with participation from the civil society. However, from the 4th action plan (2018–2020), the civil society took center stage and l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Action.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OGP raising the level of public influence from “participation” to “cooperation” during its assessment of the 4th National Action Plan. The 5th action plan (2021–2023) identified key issues, such as revitaliz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civil society. Recognizing Korea's open government activities, OGP shared them as best practices OGP during the OGP Global Summit.

The 6th National Action Plan, covering the period from 2023 to 2027, is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and evaluations of the five previous action plans, keeping considering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It is also the first time that a four-year plan has been developed instead of a two-year plan under the newly revised OGP National Handbook, requiring closer communication between the publ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ademia, and government agencies than ever before.

The Korean Open Government Committee is a public-civic consultative body with key stakeholders, including 7 central governments and 22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strive to promote values of open government including openness, transparency, and democracy. The committee played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the 6th Open Government Action Plan.

The 3rd Korean Open Government Committee	
Government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hair, Secretary),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ivate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Chairperson), Open Net Korea, Justice Alliance , Citizens’ Coalition for for Better Government, Dankook University, The Center for Public Interest Law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University of Seoul Anti-Corruption System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Law & Compan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Retis Lab, Gachon University, Code for Korea,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omen Corporate Directors Korea, Cheongju YWCA, Korea Women’s Social Workers,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EcoMom Korea

The open government contest in 2022 from October 11 to November 14 collected 51 suggestions from the public concerning the areas of transparency, anti-corruption, and participation, and 26 projects highly relevant to open government values were identified from among the national policy tasks. Following this, 22 out of the 77 projects were selected as primary projects by the committee, which initially evaluated the projects based on their compatibility with OGP values, feasibility of proposals, and their potential impact. Through follow-up consultations with government agencies, 10 projects were selected to be included in the 6th National Action Plan.

In order to mature the issues discussed in the Action Plan, the Korean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Open Government Committee, held a joint discussion with the public sector during the Open Government Week (May 8 to May 12, 2023) organized by the OGP.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s from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consultative bodies, participated in this discussion, and public proposers and government agencies deliberated together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e 6th Action Plan.

The government opened up a public feedback channel for two weeks (June 26 to July 9, 2023) on the draft National Action Plan receiv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public including “likes” and supportive comments.

After a year-long period of preparing the plan for the 6th National Action Plan to gaining consensus from civil society and relevant ministries, a total of 10 projects were selected as final projects of the 6th National Action Plan.

Anti-corrup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trengthen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Support for Anti-Corruption 2. Open and Expand Data o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utofill Request Form Service
Digital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Fill Data Blanks and Open List of Closed Public Data 4. Forecast Public Hazard through Monitoring of Big Data on Civil Complaints 5. Create Safe and Inclusive Digital Society
Civic particip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Conduct Public-Private Responses through Introduction of Civic Tech 7. Enhance Public Discussion to Prevent Hate Speech 8. Improve Universal Design System and Spread of awareness 9. Create Environment for Accessible Tourism 10. Expand Media Access for Marginalized Groups

There were other suggestions and comments made by members of the Open Government Committee that were not included as an action plan. These discussions will continue so that they can be included in the next round of the National Action Plan.

We will continue to further these discussions so that they can be included in the next National Action Plan, as well as work with the civil society to collaborate on establishing future action plans.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take the lead in implementing values of open government including openness, transparency and democracy through the promotion of public-civic partnership governance, as well as faithfully implement the National Action Plan to realize the vision of OGP.

Anti-corruption Subcommittee

The Anti-Corruption Subcommittee discussed the various opinions received through the public contest, but suggestions such as “improving legal terminology” and “decriminalizing defamation to be resolved through civil litigation” were not ultimately selected as action plan projects.

“Improving legal terminology” is important to ensure that laws with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or Japanese expressions that are distant from everyday life are expressed in simple and clear terms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easily understand their content.

In addition, if defamation is criminally punished, it infringes on freedom of expression, leads to reductions in reporting on various social injustices, and hinders the development of society by concealing unjust truths, so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defamation law in factual cases to resolve defamation through civil lawsuits as is the case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For the above two recommendations, the subcommittee will continue to conduct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s and seminars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contribute to securing national transparency and lowering Korea's corruption index.

Digital Subcommittee

The Digital Subcommittee discussed specific improvements and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related to digital government, such as e-government and public data. We will establish a tentative digital government user forum in the form of a working group or TF within the Digital Subcommittee, inviting members of the Open Government Committee, other experts, and users to operate it as an open forum to explore specific improvements and policy alternatives in a free atmosphere, and submit the results of the forum discussions to the public opinion collection channel related to digital government.

Civic Participation Subcommittee

The Civic Participation Subcommittee held deliberation meetings on the public suggestions collected through the public contest, but the suggestions, such as “enhancing the publicity of energy data,” were not selected as action plan projects. “Enhancing the publicity of energy data” is a government-wide issue that requires governments to make efforts to accumulate and utilize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and civil society is increasingly demanding this. Internationally, solidarity efforts continue to call on governments to take action to improve citizen access to environmental data and information and to share information.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has published a research report in 2021 on Open Data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proposing roles and actions for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stakeholders. In order to make energy data more public, governments should strive to build energy information subdivided by industry, sector, and process and make joint efforts with civil society to establish policies for the provis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platforms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List of Commitments

Category	No	Commitments	Relevant Organization
Anti-corruption	1	Strengthen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Support for Anti-Corruption	ACRC ¹ (Protection and Reward Policy Division)
	2	Open and Expand Data o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utofill Request Form Service	ACRC (General Administrative Appeals Division, Administrative Appeal Integrated Planning TF)
Digital	3	Fill Data Blanks and Open List of Closed Public Data	MOIS ² (Public Data Policy Division)
	4	Forecast Public Hazard through Monitoring of Big Data on Civil Complaints	ACRC (Complaints Information Analysis Division)
	5	Create Safe and Inclusive Digital Society	MSIT ³ (Digital Inclusion Policy Team)
Civic participation	6	Conduct Public-Private Responses through Civic Tech	MOIS (Public Data Policy Division)
	7	Enhance Public Discussion to Prevent Hate Speech	MOIS (Innovation Planning Division), NHRCK ⁴ (Discrimination Remedy Division)
	8	Improve Universal Design System and Spread of Awareness	MCST ⁵ (Visual Arts and Design Division)
	9	Create Environment for Accessible Tourism	MCST (Tourism Policy Division)
	10	Expand Media Access for Marginalized Groups	KMCC ⁶ (Media Diversity Policy Division)

1. ACRC: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2. MOIS: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3.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4. NHRCK: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5.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6. KMCC: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1. Strengthen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Support for Anti-Corruption

- Relevant Organizatio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Protection and Reward Policy Division, ACRC)
- Relevance to OGP Values: Protect and expand the civic sphere to facilitate civic participation and anti-corruption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Received the proposal through the public/government contest (October 11 to November 14, 2022)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Anti-corruption Subcommittee meeting (March 17, 2023)
- Developed as a draft at the Anti-corruption Subcommittee meeting (April 21,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Discussed during Open Government Week (May 10,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serves as an effective system for controlling corruption across society as a whole, including viol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in areas that are not easily monitored or supervis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civil society. Korea, along with other major countries, has introduced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s and continues efforts to strengthen and expand their use; however, there are still cases in which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by law.

In particular, blind spots persist where certain matters – although highly relevant to the public interest –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and thus not protected under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Furthermor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differ depending on the category of reportable offense, such as corruption,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fraudulent claims, improper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Details of the Commitment

Establish a system to protect and suppor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 Enhance equity across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by reforming the current legal framework, which applies different provisions to each category of reportable offense including corruption,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fraudulent claims, improper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so as to ensure that all whistleblowers have access to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when reporting any corruption-related or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 Violations of laws stipulated for reporting under the Act on Anti-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Public Fund Recovery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the Duties of Public Servants.

Expand the range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support levels

- Broaden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rovisions or by amending the relevant laws that define such infringements.
- To eliminate blind spots regarding the public interest that are not covered by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laws currently beyond its scope – and thus not afforded protection and support – will be reviewed, and those determined to have a high relevance to the public interest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 The relevant law shall be added to the list of ‘Laws Subject to Public Interest Infringements’ under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nex.

- In addition, the grounds for granting rewards for public interest reports have been expanded from ‘recovery of revenues of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to ‘recovery of revenu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is change has been publicized to actively detect public interest infringements occurring in public institutions other than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nticipated Outcomes

Refine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expand the scope and levels of such protection and support, thereby creating a safe environment for reporting that encourages citizen participation in anti-corruption efforts and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the public interest.

Additional Information

N/A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Prepare and implement legislation on compensation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related to revenue recovery by public institutions.	June 22, 2023	September 22, 2023
Pursue legislation to reform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August 1, 2023	On going
Pursue legislation to expand the scope of laws covering viol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September 1, 2023	On going

2. Open and Expand Data o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utofill Request Form Service

- Relevant Organization: ACRC (General Administrative Appeals Division, Administrative Appeal Integrated Planning TF)
- Relevance to OGP Values: Prevent corruption by enhancing transparency through open data and expanding access to administrative appeals data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Received the proposal through the public/government contest (October 11 to November 14, 2022)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Anti-corruption Subcommittee meeting (March 17, 2023)
- Developed as a draft at the Anti-corruption Subcommittee meeting (April 21,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Discussed during Open Government Week (May 10,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There are difficulties for the public in preparing claims when seeking redress for rights or interests infringed by unlawful or unjust dispositions or omissions of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se difficulties should be address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alize open government by strengthening information disclosure.

Details of the Commitment

Establish a LegalTech One-Stop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cluding an autofill request/application form service and provision of customized cases to expand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appeals.

* An online service that combines law (legal) and technology.

① Open and expand data

Convert administrative appeals data into machine-identifiable formats and broaden the scope of disclosure to realize an open government that transparently discloses information.

② Provide customized cases

Provide customized cases references aligned with each claimant's situation by analyzing instances of illegal or unfair administrative agency decisions, and relevant past cases.

③ Autofill Request Form Service

Utilize administrative appeal decision data and implement auto-completion services based on the standard format of administrative appeal petitions and applications, thereby improving system accessibility for individuals who encounter difficulties in completing these forms.

Implement a One-Stop Administrative Appeals Service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ervice with autofill request forms through customized model cases.

- Integrate the online channels of 90 administrative appeals organizations, including general and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into a single platform to expand disclosure of decisions and facilitate the preparation of request and application forms.

⚠ Anticipated Outcomes

Expand the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appeal decision data to enable the public to more clearly understand what constitutes illegal or unfair administrative action, and what to prepare and argue in order to file a claim.

📅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Build and launch the EASY Administrative Appeals Service (1st Opening). ※ Including 51 agencies such a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nd city/provinci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etc	July 1, 2022	July 30, 2023
BPR, ISP, and ISMP for implementing a One-Stop Administrative Appeals Service ※ Prepare a strategic informatization plan and implementation roadmap to integrate scattered online administrative appeals channels, and to open and expand big data on administrative appeals decisions.	February 23, 2023	August 21, 2023
Build a One-Stop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 Integrate 90 onlin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s, establish a big data database, and lay the groundwork for disclosing decisions by type of illegality or unfairness.	January 1, 2024	June 2, 2025
Operate the One-Stop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June 2, 2025	On going

❓ Additional information

N/A

3. Fill Data Blanks and Open List of Closed Public Data

- Relevant Organization: MOIS (Public Data Policy Division)
- Relevance to OGP Values: Increase the inclusive value of polici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a diverse population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Received the proposal through the public/government contest (October 11 to November 14, 2022)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Digital Subcommittee meeting (March 17, 2023)
- Developed as a draft at the Digital Subcommittee meeting (April 19,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Discussed during Open Government Week (May 12,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Korea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in 2013 and has since actively promoted policies to expand the provision and utilization of public data. As a result, more than 103,000 public datasets had been released (as of June 2025), achieving first place in the Open Useful Reusable (OUR) Data Index for four consecutive rounds (OECD, 2015, 2017, 2019, 2023). The number of downloads on the public data portal exceeded 83 million, and the number of open API applications surpassed 6.27 million (as of June 2025)

* (Example) By 2024, through the National Key Data Open Plan, 217 key national datasets had been disclosed, and more than 3,200 services utilizing public data were created, generating added value. The initiative has also contributed to solving social problems by providing data such as urea water sales information and COVID-19 mask inventory information.

However, public data policies to date have been promoted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and public institutions as suppliers, and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and businesses as consumers have been relatively lacking.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 that consumers could not know the full range of data held by administrative and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datasets that are not open to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lose not only the public data provided by administrative and public institutions but also information on public data that still is not disclosed, so that the public's right of access and use can be expanded.

Details of the Commitment

Make the full list of public data, including data currently withheld, available to the public, and enable citizens to request the data they need so that the reasons for withholding it can be reconsidered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if necessary).

① Public

- Provide information such as a list of public datasets that are currently not open to the public.
- Provide the public with information regarding public datasets that are not open to the public, including the dataset name, the data-producing organization, and other relevant details.

② Private

- May request the disclosure of public datasets not currently open to the public, when deemed necessary.
- Promote through the policies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such as Parti Citizen Open Data Lab, Korea Data Journalism Awards, etc.

③ Public-Civic Cooperation

- Review undisclosed public data based on the Public Data Basic (Implementation) Plan and promote evaluation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public data provision so that it can be fully opened.
- Discuss the privatization of closed data through various public-civic governance mechanisms, such as the Open Data Forum.

💡 Anticipated Outcomes

Enhance the quality of public data utilization by expanding data provision to address the diverse needs of the public.

Ensure the empowerment of the public by involving them in the process of opening public data.

📅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Establish a government-wide mid- to long-term public data opening plan	June 2023	To continue on annual basis
Create a specialized working group to open 'undisclosed' public data	June 2023	To continue on annual basis
Assess the status of public data provision	June 2023	To continue on annual basis
Implement the 4th Public Data Basic Plan	June 2023	December 2025
Develop and implement the 5th Public Data Basic Plan	January 2026	May 2027

🔍 Additional Information

N/A

4. Forecast Public Hazard through Monitoring of Big Data on Civil Complaints

- ACRC (Complaints Information Analysis Division)
- Relevance to OGP Values: Enhance public accountability for public life and safety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Discovered as a policy relevant to open government (February 2023)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Digital Subcommittee meeting (March 17, 2023)
- Developed as a draft at the Digital Subcommittee meeting (April 19,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Discussed during Open Government Week (May 12,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cope of administrative service for the people based on situational awareness, decision-making and foresights rendered by the processing and analysis of big data. Disaster management also relies heavily on processing the massive amounts of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generated by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to meaningful information

In response, the government identifies recurring complaint issues that typically emerge during specific periods and provides early notification before potential impacts escalate. The government also shares information on newly emerging or rapidly increasing civil complaints to raise awareness, thereby enabling relevant agencies to take thorough and preemptive action in advance.

Details of the Commitment

The ACRC operates a pan-governmental complai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which aggregates and analyzes big data from over 14 million civil complaints annually, collected via the e-people platform and local government channels

Through comprehensive civil complaint monitoring, the government issues preliminary notices on complaints that may potentially cause widespread public inconvenience or harm, thereby prompting relevant agencies to undertake timely and appropriate measures

Complaint forecasting process

Issuance criteria

- While the primary focus is on the volume of complaints, complaint forecasts are categorized into regular and ad-hoc types based on recurrence patterns and timing of issuance

Issuance methods

- Included in the Voice of the People Weekly and Monthly Trends and listed in the Complaint Analysis Division System
- Sending forecast issuance notices to competent authorities

Follow-up Actions

- Monitoring complaint trends following the issuance of a forecast
- Adjusting the forecast level upward or downward in response to the number of complaints received

Anticipated Outcomes

By promptly capturing public voices on urgent social issues, safety concerns and public inconveniences - as reflected in civil complaint big data - the government issues complaint forecasts that help minimize potential harm and support proactive prevention.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Monthly Ad-hoc Forecast Issuance	April 2023	On going

Additional Information

N/A

5. Create Safe and Inclusive Digital Society

- Relevant Organization: MSIT (Digital Inclusion Policy Team)
- Relevance to OGP Values: Promote inclusion by narrowing the digital divide and foster civic engagement through enhanced digital accessibility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Discovered as a policy relevant to open government (October 11 to November 14, 2022)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Digital Subcommittee meeting (March 17, 2023)
- Developed as a draft at the Digital Subcommittee meeting (April 19,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Discussed during Open Government Week (May 12,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As digitalization accelerates – driven by advances such as generative AI – gaps in access to an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may not only deepen existing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but also create new forms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n response, the government operates the Digital Learning Center program to provide accessible digital education for al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unable to attend the centers due to physical limitations, customized in-home digital education services are also offered.

* (Example) From 2020 to 2024, a total of 3.41 million citizens who experienced difficulties in using digital technologies received basic digital literacy education through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Since 2022, mobile digital education services using buses have been provided to residents in underprivileged areas. Beginning in 2024, 36 regional Digital Learning Centers have been operated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access digital education anytime, regardless of location. As a result of these policies, the digital literacy level of vulnerable groups relative to the general public increased from 69.9% in 2019 to 77.5% in 2024.

Meanwhile, in order to ensure that digitally disadvantage groups –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 experience no inconvenience in using digital services, the government operates a kiosk UI platform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accessible kiosks. Furthermore, over 3,000 units of approximately 120 types of assistive ICT devices are distributed annuall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valuate the annual performance of these policies, the government conducts the Digital Divide Survey and the Web Accessibility Survey each year, and uses the results to feed-back into the policy process.

Details of the Commitment

Establish an environment where- not only digitally marginalized groups but all citizens can access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without discrimination, regardless of time or location

① Expand digital education

- In order to operating Digital Learning Center hubs, the government provides mobile outreach education at senior community center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support persons who face difficulties with digital technologies. The program offers practical, everyday digital skills training – ranging from the use of kiosks and smartphones to the application of generative AI.
- In order to support constant, voluntary, and repetitive learning, emulators* for kiosks, mobile applications, and other tools with high frequency of use in daily life will be continuously disseminated.

* (Emulator) A training program that simulates commonly used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 such as ChatGPT, online banking, and e-commerce platforms – for practical, real-life application

② Promoting the Distribution of ICT Assistive Devices and Enhancing the Accessibility of Digital Devices

- Leave no one behind and ensure that everyone enjoys the benefits of digital technology by expanding access to digital education and ICT assistive devices and etc.
- Operate a kiosk UI platform with the aim of ensuring access to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for older adul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isseminate accessibility improvement solutions – including the provision of design guidelines and user interface (UI) resources.

③ Digital Divide Survey and Web Accessibility Survey

- Assess the annual performance of digital divide reduction policies, secure foundational data for effective policymaking by surveying the levels of digital inclusion—access, skills, and usage—among the general public and vulnerable groups such as older adul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iagnose the state of the digital divide in Korea.
- Assess the state of web accessibility among domestic businesses, ensure that all user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adults, can access information provided on websites, and utilize the findings as foundational data for policy-making.

💡 Anticipated Outcomes

Leave no one behind and ensure that everyone enjoys the benefits of digital technology by expanding access to digital education and ICT assistive devices, etc

📅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Operate Digital Learning Center	April 2023	On going
Provide ICT assistive de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September 2023	On going
Digital Divide Survey, Web Accessibility Survey	September 2023	On going

📖 Additional information

Correlated to the National Policy Task #21-2

6. Conduct Public-Private Responses through Civic Tech

- Relevant Organization: MOIS (Public Data Policy Division),
- Relevance to OGP Values: Protect the civic sphere to strengthen democracy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Discovered as a policy relevant to open government (October 11 to November 14, 2022)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Digital Subcommittee meeting (March 16, 2023)
- Developed as a draft at the Digital Subcommittee meeting (April 20,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Discussed during Open Government Week (May 12,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As social issue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there is a need for citizen-led, autonomous, and proactive solutions to address social problems

Civic Tech is a new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that seeks to solve social issues and problems by utilizing various intelligent technologies directly by citizens. In order for Civic Tech to be activated, it is necessary to ensur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civil sectors within the governance framework.

Details of the Commitment

Provide data to government policy-making processes and embrace a Civic-Tech approach to solving problems directly with the people.

* Example: (Government) Provide information 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Citizen) Utilize data → Develop an app to provide travel rout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ticipated Outcomes

Organizing citizen-led seminars and sharing sessions through the Open Data Forum

① Seminars

Select key issues and topics in the field of public data through surveys of forum members and the general public, and plan and hold seminars and lectures

② Sharing Sessions

Present the annual activities of the Open Data Forum (including best practices from Living Labs).

Operate Living Labs

- Operate Living Labs as citizen-participatory projects that utilize public data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 Provide mentoring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mmunities, including civic organizations, to use public data
- Run Living Lab contests and encourage the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s

Build public-civic partnerships

- Attempt to solve social problems using data by establishing a public-civic partnership system capable of quickly responding to social issues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Operate the 2023 Open Data Forum and Civic Tech	June 1, 2023	December 31, 2023
Operate the 2024 Open Data Forum and Civic Tech	June 1, 2024	December 31, 2024
Operate the 2025 Open Data Forum and Civic Tech	June 1, 2025	December 31, 2025
Operate the 2026 Open Data Forum and Civic Tech	June 1, 2026	December 31, 2026
Operate the 2027 Open Data Forum and Civic Tech	June 1, 2027	December 31, 2027

Additional Information

N/A

7. Enhance Public Discussion to Prevent Hate Speech

- Relevant Organization: MOIS (Innovation Planning Division), NHRCK (Discrimination Remedy Division)
- Relevance to OGP Values: Protect the civic sphere to strengthen democracy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Received the proposal through the public/government contest (October 11 to November 14, 2022)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Civic Participation Subcommittee meeting (March 16, 2023)
- Developed as a draft at the Civic Participation Subcommittee meeting (April 20,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Discussed during Open Government Week (May 12,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Hate speech undermines the dignity of individuals belonging to particular groups by negatively stereotyping or stigmatizing them. It promotes unfair treatmen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creates barriers to their participation in society, thus weakening national integration and contributing to social unrest. Furthermore,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recognize the need for government action to address hate speech.

※ In 201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Perception Survey on Hate Speech found that 80.9% of respondents respon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government action against hate spee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prehensive, pan-governmental response that includes regulating highly harmful hate speech and related behaviors, raising public awareness, fostering a social environment that prevents hate speech through anti-discrimina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o identify and disseminate existing hate speech response plans at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and to foster public dialogue and communication to ensure a more effective society-wide response to hate speech

Details of the Commitment

Share the Korean government's plan to counter hate speech and organize discussions involving the public sector, businesses, media, researchers and citizens, among others.

Organize a public-civic dialogue in conjunction with the OGP Global Open Government Week to build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to address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nticipated Outcomes

Develop the basis for hate speech response policie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civil society.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Researc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relevant to responding to hate speech	August 2023	May 2024
Hold hate speech response conference bringing together governments, business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ugust 2023	On going
Hold discussions during the 2024 World Open Government Week	May 2024	May 2024
Hold policy discussions on countering hate speech, aligned with the International Day for Countering Hate Speech (June 18, 2024)	June 2024	
Study on international cases and domestic challenges in governmental responses to hate speech	January 2025	December 2025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a Hate Speech Response Manual for Local Governments	March 2025	August 2027
Hold discussions during 2026 World Open Government Week (Focus: Exploring policy responses to hate speech at the national government level)	May 2026	May 2026
Hold discussions during 2027 World Open Government Week (Focus: Exploring policy responses to hate speech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May 2027	May 2027

Additional Information

N/A

8. Improve Universal Design System and Spread of Awareness

- Relevant Organization: MCST (Visual Arts and Design Division)
- Relevance to OGP Values: Include the marginalized and facilitate civic engagement through public-civic partnership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Received the proposal through the public/government contest (October 11 to November 14, 2022)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Civic Participation Subcommittee meeting (March 16, 2023)
- Developed as a draft at the Civic Participation Subcommittee meeting (April 20,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Public design projects for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adults, and other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but their promotion remains insufficient at the county and district levels. In addition, safety and security projects are location-based, with a high proportion of 91% among municipal and district governments; however, universal design for all remains relatively lacking, with 35.3% in cities(si), 17.8% in counties(gun), and 13.5% in districts(gu).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such as the transition to a super-aged society and the rapid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opportunities should be created to strengthen the system for disseminating universal design so that everyone—including older adults,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oreigners—can enjoy the environment without limitations of disability, language, or behavior, thereby contributing to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self-sustainability.

Details of the Commitment

Enhance Korean-style universal design and raise awareness through physical or digital signage and color improvement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olor-blind, older adults, preschoolers, foreign workers, immigrants, and foreign tourists.

① Develop and Diffuse Innovative Public Design Models

- In response to evolving societal conditions – including demographic shifts (e.g., declining birth rates and population ag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e.g., A.I.), and environmental changes (e.g., climate changes) - the government aims to develop and disseminate exemplary models of public design that can be implemented in an innovative manner
- (2024) Pilot implementation of public design innovation sites and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an innovative model

② Develop pan-governmenta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 (2022) Marine Safety and Guidance System Guidelines (Korea Coast Guard); Korean Science Center Universal Design Guidelines (National Science Museum)

- (2023)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Transportation and Pedestrian Safet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ublic Design Guidelines for Juvenile Detention Facilities (Ministry of Justice)
- (2024) Resident registration card design improvement (MOIS), Development of bicycle travel information system guidelines (MCST)

③ Engage the public to improve public design ideas and select best practices

- Korea Public Design Award (applying a public voting process), Public Design National Idea Contest (promoting mentoring workshops with public design experts to identify and refine outstanding ideas)

④ Develop and disseminate the Universal Design National Standards Manual

- Develop and distribute a manual that improves visual information and color schemes, taking into account the perceptual needs of marginalized groups such as foreigners and older adults, and establish a national standard framework for universal design to be implemented by cities,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⑤ Establish a sharing platform to raise awareness of universal design

- Enhance public awareness and empathy through public design festivals, and deliver universal design education through public design roundtables.

🔔 Anticipated Outcomes

Include marginalized groups and revitalize communities by improving universal design systems and promoting related projects

🗓️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Develop and pilot an integrated public design (universal design) improvement model for each type of destination (creating happy spaces through public design).	May 2023	December 2023 (4 new models)
Develop pan-governmenta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June 2023	December 2023 (2 times)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workshops to improve public design ideas (Public Design Idea Contest).	July 2023	October, 2023 (Awards, once a year)
Select best practices in public design for public participation (Korea Public Design Award).	May 2023	October, 2023 (Awards, once a year)
Host public design festivals and discussions	October 2023	Continue (1 time)
Develop and distribute the Universal Design National Standards Manual	March 2024	November 2024
Pilot implementation,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a public design model responding to societal challenge (Supporting Innovation through universal design)	January 2025	December 2025 (4 new models)
Develop pan-governmenta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January 2025	December 2025 (2 times)
Select best practices in public design for public participation (Korea Public Design Award).	May 2025	October, 2025 (Awards, once a year)
Host public design festivals and discussions	October 2025	October 2025 (On an annual basis)

9. Create Environment for Accessible Tourism

- Relevant Organization: MCST (Tourism Policy Division)
- Relevance to OGP Values: Include the marginalized and facilitate civic engagement through public-civic partnership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Received the proposal through the public/government contest (October 11 to November 14, 2022)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Civic Participation Subcommittee meeting (March 16,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As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2025,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rrier-free tourism environment that serves not only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also older adults.

The right to travel for tourists from disadvantaged groups –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adults, familie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gnant women – remains limited, making it necessary to establish tourism infrastructure that is easily and conveniently accessible to all.

Details of the Commitment

Create accessible tourism destinations* for vulnerable groups of tourists—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adults, familie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gnant women—to ensure convenient and safe travel; provide barrier-free tourism information; and train specialized tour care professionals to assist travel activities.

* Tourism destinations that are safe and accessible to all tourists –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adults, familie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gnant women – without restrictions on mobility and tourist activities

① Environment

-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within tourist destinations, including the repair and upgrade of facilities such as parking areas, restrooms, ramps, walkways steps, etc.
 - ※ In 2024, 30 new accessible tourism destinations were created, bringing the cumulative total to 162 sites.

② Information

- Discover barrier-free travel courses, enhance and expand the barrier-free travel information database (targeting 1,000 new entries annually), and upgrade the barrier-free tourism information platform, including its management and operation

③ Service

- Train tour care professionals; foster and support barrier-free travel agencies; provide travel opportunities for tourists from disadvantaged groups (sharing trips); deliver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nd develop contents, etc.

🔔 Anticipated Outcomes

Develop accessible tourism destinations that allow all citizens, not only tourists from disadvantaged groups, to travel conveniently and safely free from barriers

📅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2023) Select and develop 20 new barrier-free tourist attractions	January 2023	December 2023
(2024) Select and develop 30 new barrier-free tourist attractions	January 2024	December 2024
(2025) Select and develop 20 new barrier-free tourist attractions	January 2025	December 2025
(2026) Select and develop 30 new barrier-free tourist attractions	January 2026	December 2026
(2027) Select and develop 30 new barrier-free tourist attractions ※ A cumulative total of 252 sites by 2027	January 2027	December 2027

🔍 Additional information

Correlated to the National Policy Task #61-2, “Create a travel environment that everyone can enjoy”

10. Expand Media Access for Marginalized Groups

- Relevant Organization: KMCC (Media Diversity Policy Division)
- Relevance to OGP Values: Include the marginalized and facilitate civic engagement through public-civic partnership

How the Commitment Came to be

- Discovered as a policy relevant to open government (February 2023)
- Adopted as a commitment at the Civic Participation Subcommittee meeting (March 16, 2023)
- Reviewed in the Government-Civil Joint Meeting (April 28, 2023)
- Public Feedback Collection (Innovation 24 OGP Discussion Board) (June 26 to July 9, 2023)

Background

With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transition towards a contactless society, the importance of media accessibility has increased substantially. Howeve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depend on broadcasting and media for most of their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continue to encounter significant barrie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edia access environment for marginalized groups, including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to support media use and engagement and to enhance their right to information.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ensuring media accessibility for marginalized group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n important policy for creating a media world that is in step with the public.

Details of the Commitment

Establish a media access environment for marginalized groups, including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to support their use and utilization of media and strengthen their right to information.

① Support the creation of accessible broadcast content

- (Current status) In order to assist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in watching broadcasts, broadcasters are mandated to provide accessible broadcasting – such as closed captioning, on-screen description, and Korean Sign Language – and support is provided for their production. In addition, to ensure the learning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ible broadcasting – such as closed captioning and on-screen description – for educational programming, and content tailored to the life cycl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produced and distributed.

- (Plan) Conduct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and usage of broadcast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gather the opinions of visually and hearing-impaired audiences, and review the findings for potential incorporation into projects supporting the production of disability-friendly broadcasting

② Make devices accessible to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

- (Current status) Develop and distribute broadcasting receivers (televisions) equipped with customized features for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enabling them to conveniently watch broadcasts
- (Plan) Conduct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and usage of broadcast receivers (televisions) for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to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and review the findings for incorporation into future TV distribution projects.

💡 Anticipated Outcomes

Contribute to improving the media access environment for marginalized groups, including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through the production of inclusive content and the enhancement of device accessibility

📅 Action Plans

Milestone Activity with a Verifiable Deliverable	Start	End
Support accessible broadcasting	On going	On going
Conduct a survey assessing public satisfaction with, and accessibility of broadcast services	On going	On going
Provision of televisions for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On going	On going
Conduct a survey assessing satisfaction levels and usage patterns of televisions for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	On going	On going

❓ Additional information

Correlated to the National Policy Task #59, “A digital and media world that accompanies the people”

